

시론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1천110조 원. 이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 떠안은 사회적 부채의 총합이자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처절한 비명이다. 이 빛의 본질을 외면한 채, 생존을 위한 채무 조정 논의에 '도덕적 헤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 위기의 본질은 개인의 나태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실패와 거시 경제의 구조적 폭력이다.

통계로 증명된 재난, 코로나가 남긴 '사적 부채'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빛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하느라 영업을 포기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숫자로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112조 7천억 원에 달한다. 3년 새 300조 원 넘게 폭증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78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대출 잔액만 744조 원에 육박한다. 소득으

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자영업자'는 40만 가구를 넘어섰다.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31%로 1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8%에 육박하며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깝다. 지난 한 해에만 95만4천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 하루 평균 2천600여 개의 가게가 사라진 셈이다. 이는 통계가 아니라, 95만 가구의 생계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의 증거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직접 GDP의 10%가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현금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빚을 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달랐다. 직접 지원 대신 '대출'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고, 이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고스란히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자영업자 부채는 이들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실패가 남긴 청구서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국가의 책무를 묻는다

채무조정은 시혜나 자선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 고통을 방치했다면, 국가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전가한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가는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이행이다. 이는 '폐자기'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겨졌던 부담을 국가가 다시 책임지는 '정상화' 과정이다.

세계적 석학의 통찰과 선진국의 경험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명확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과 경기 침체가 심화될 때, 정부는 부채의 빚에 빠진 이들을 구제하고 재기할 기회를 주어야 경제 전체의 회복력이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그의 통찰은 국경을 넘어선 진리다. 국내 석학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역시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과 자영업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채무조정을 통한 연착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금은 행동할 때,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된다

물론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적 불이행자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가능성 때문에 전체를 구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성실 생활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별도의 지원책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붕괴는 골목 상권의 소멸, 대규모 실업, 내수 기반의 경제체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시작이다. 무너지는 경제의 근간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 이상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때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브라질 톨라대통령)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정연한방병원장

수면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현대 사회에서 잠을 자기 힘든 사람들, 불면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면증은 신경정신과학적으로 수면장애라 일컫는다. 수면장애에는 잠에 들기 어려운 입면장애, 깊은 잠에 못들고 깨어버리는 수면 유지장애, 원하는 시간보다 너무 일찍 일어나는 조기각성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흔히 말하는 불면증은 잠에 들기 힘든 입면장애를 주로 의미한다.

수면장애의 원인은 다양하다. 흡연, 음주의 생활습관 요인과 항암제, 갑상선 치료제 등의 약물요인이 있다. 그리고 소음, 밝기에 따른 외부요인이나 관절염,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요인도 해당한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인 요인 또한 문제가 된다.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피로감, 기면성 저하,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체온 저하, 피부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의 진단은 면담을 통한 병력청취와 수면 다원 검사(Polysomnography), 심리 검사 등을 시행한다. 불면증 진단의 핵심은 '검사상 불량한 수면의 증거'가 아닌 '불충분한 수면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가 중요하다. 가령, 8시간 동안 수면을 해도 기상 시 피로감이 심하고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으로 볼 수 있다.

병력청취는 수면 시간, 기상 시 편안함, 약물복용력, 과거력, 생활습관 등을 파악해 수면의 주관적인 정도를 체크한다. 수면 다원 검사는 검사실에서 환자가 검사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직접 수면을 하여 수면 중의 뇌파, 심전도, 안구운동, 턱 근전도, 사지 움직임, 수면자세, 호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이다.

불면증의 치료는 잠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약물치료, 침구치료, 한약치료를 시행하면서 수면 위생 교육과 인지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약물치료는 졸피뎀(zolpidem)과 벤조디아제핀계(benzodiazepine) 약물을 주로 사용한다.

한의학에서 불면증은 양기가 성하고 음기가 부족하거나, 가슴답답함을 의미하는 번조(煩躁) 등을 원인으로 본다. 침구치료에서는 음기와 양기의 조화를 위해 발목 바깥쪽 복

사뼈의 바로 아래 움푹한 곳인 '신맥(申脈)혈'과 발목 안쪽 복사뼈의 바로 아래 움푹한 곳인 '조해(照海)혈'을 주로 활용한다.

한약치료는 불면증에 약물치료와 달리 수면 유지에 효과적이며 양약에서 나타나는 중독성,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없다. 약재로는 과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복령(茯), 황련(黃連)을 다용한다. 한약 처방으로는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가미귀비탕(加味歸脾湯),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에 효과적인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이 많이 처방된다. 그럼에도 한약은 개인 체질이 중요하므로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수면 위생 교육은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관리 요령이다. 적절한 운동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 몸을 이완시켜주기, 커피와 술, 담배 등을 멀리하고 수면 3시간 전에는 공복상태 유지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관리하기 등이 있다. 수면 인지치료는 잠에 대한 인식을 재설정하는 방법이다. 잠을 잘 못갔다고해서 이를 절망적으로 여기지 않고, 숙면에 대해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바른 인식을 만들어준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낮에는 열심히 움직였으면 밤에는 충분히 쉬어줘야 건강한 내일이 될 수 있다. 활동만큼 휴식도 중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민선 20년 신뢰받지 못한 인사를 청산할 기회다. 민선 20년 동안 신뢰받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폭포시 인사를 두고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의 권위로 관선 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이지만 1일 부임했다. 부시장의 취임 일성으로 외부 인사청탁 자체 당부와 함께 공정

한 인사를 표방해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청사 안팎에서는 그동안 민선 8기 인사에서 잘못된 인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과 불편한 관계의 공무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 여성 직원들이 근무하기 힘든 기관에 장기간 파견해 보복했다는 의혹, 공무원 개인과의 관계없이 가족이 반대편 진영에 가깝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전보 조치 등이 잘못된 인사로 꼽힌다.

이와 함께 가족 찬스, 측근 찬스 등 각종 찬스를 이용해 원칙에 반한 인사 특혜자, 관례에 따라 6급 승진, 사무관 승진 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통을 깨고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주문하고 있다. 200여명이 넘는 사회복지직렬 등 전문직에 대한 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청내 안팎에서 우려와 제언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인사 불신이 초래한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부임한 부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모든 일은 속도도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구성하는 인사를 고민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사는 어려우나 원칙과 기준,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인사는 분명히 가능하다.

이번 인사는 시민 신뢰 회복과 행정의 공정성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社說

평화 제전 세계양궁대회 北 선수단 참가 성사됐으면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세계연맹에 남북 스포츠 교류와 국제 협력 차원에서 북한 선수단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지속 소통과 협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여러 국내외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화와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는 만큼 평화의 제전으로 승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세계양궁선수권은 9월5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막한다. 이어 장애인대회도 동시에 개최된다. 결승전은 광주정신을 간직한 5·18민주광장에서 열려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한다. 최근 이 곳에서 국가대표 김우진·이우석·김제덕·임시현·강재영·안산 등이 이벤트 매치로 분위기를 달궜다. 이들은 폭염 특보가 내려진 찜통 더위에서도 강한 집중력으로 명승부를 전개해 금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키웠다.

조직위는 프레 행사 격인 제43회 대통령기양궁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흥행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경기장 운영, 관람 환경 등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끝마친 셈이다. 특히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안고 오는 주말에는 '광

주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시·도민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5·18민주광장 식전행사와 개회식 뒤 참가자들은 LED 촛불을 들고 금남로·충장로 일원을 도는 걷기 퍼포먼스를 펼쳐 대회를 널리 알린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전 세계에 문화·역사·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축제다. 꼭 그래야 한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되는 등 지구촌 각지에서 이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인류의 염원인 평화와 연대를 위한 상징적 무대로 부각될 것이다. 불과 2달 여를 남겨둔 촉박한 일정이지만 북한도 참여를 긍정 검토해야 한다.

이번 대회가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다. 조직위도 북한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위해 뛰고 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폭 지원해야 한다. 외교 관계를 총망라해 반드시 성과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광주에서 치러지는 2025세계양궁선수권이 역대 최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어설픈 광주시 행정에 거액의 배상금 물어낼 판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 논란, 영산강 역사이동 존 사업 관련 시정 압수수색, 준공영제 시내버스 전면 파업,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지연, 이재명 대통령 호남 타운홀 미팅 전락 부재 등 온갖 악재에 휩싸였다. 강기정 시장은 7월 정례조회에서 최근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숨고를 틔고 없이 이번엔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구설에 휘말렸다. 해당 사안은 이귀순 시의원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 기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사연인즉 광주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합작법인 정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를 진행하던 중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으로부터 2천100억원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중재 절차 종료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정빛고을 측의 손실 발생 사유가 대부분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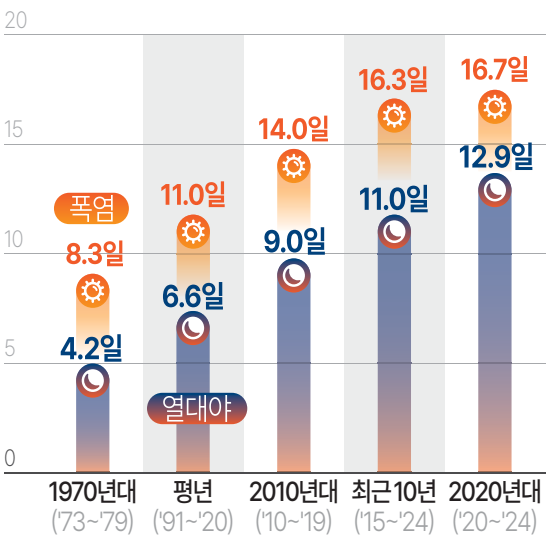
집었다.

기업의 이윤 추구로 볼 수 있지만 시민 삶과 직결된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윤리의식 부재는 안타깝다. 시의회의 비판처럼 경영 오판과 운영 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설령 광주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느닷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해설을 청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초 신청액 78억원에서 27배 증액됐다. 상식선을 넘어섰다. 흡사 덫터기 씌우는 행태다.

어설픈 광주시 행정이 눈총받고 있다.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했으나 결과적으로 더 꼬이고 말았다. 제대로 알리기는 커녕 이례적으로 금액이 눈덩이로 불어나기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첨예한 이해 다툼에서 신뢰 훼손을 제기한다고 해도 실익이 따를지 모르는 일이다. 민선8기 마지막 4년차에 접어들었다. 재선 도전이 거론되는 마당에 강기정 시장의 심정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강 시장은 조회에서 공식자들에게 감사와 의기투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민들은 3년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픽 뉴스

폭염·열대야일수 현황



연합뉴스

자료:기상청

우리나라 2010년대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1970년대 대비 각 1.7배,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973~2024년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2일 밝혔다.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상승했다. 1970년대 대비 2010년대 폭염일수는 평균 8.3일에서 14.0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0일로 2.1배 늘었다. 2020년대의 경우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평년(1991~2020년)보다 5.3일, 4.4일 많다.

폭염 1위는 2018년 31.0일이고, 2위는 지난해 30.1일이다. 열대야 일수는 2024년이 24.5일로, 2위인 1994년 16.8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1994년을 제외하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 모두에서 최근 10년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설실부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9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